

<미래를 여는 문> 앞에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확인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낡은 시대의 성장논리가 더 이상 우리의 대안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고 5개월, 저에겐 국민의 좌절과 분노, 변화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문재인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국민이 우선인 시대, 사람이 먼저인 시대입니다.

과거 케네디 대통령은 “조국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묻기 전에,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국민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국민이 삶속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자원분배에서 사람을 가장 우선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SOC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하고, 이미 시행중이거나 확정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검토 단계의 대규모 토건 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한정된 국가 재정을 ‘4대강’과 같은 토건 사업보다 사람에게 우선 투자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사람경제’, ‘공정경제’를 실현할 것이며, 그것은 ‘복지국가 5개년 계획’으로 뒷받침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오늘(현재)을 바꾸어야 옵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오늘(현재)을 연장할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넓은 시대와 새로운 시대가 갈리는 길목에 놓인 ‘일자리 혁명’,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이라는 ‘다섯 개의 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겠습니다.

변화를 한 번에 이루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저에겐 국정운영경험에서 얻은 성공과 실패의 교훈이 있습니다. 정책을 말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수권세력이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시대로 가는 희망의 가교가 되겠습니다.

12월 19일.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2012. 11. 11

목 차



서문/ 미래를 여는 문 앞에서

I. 일자리혁명의 문	1
1. 사람경제 실현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3
2. 세대공존과 융합을 위한 좋은 일자리 나누기	7
3.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9
4. 고용안정체계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지키기	12
II. 복지국가의 문	15
1.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보장	17
2. 민생지출을 줄이는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19
3.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21
4.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실현	23
III. 경제민주화의 문	25
1.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육성	27
2. 공평과 정의를 위한 재벌개혁	29
3.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가계부채 대책	30
4. 금융소비자의 권리찾기, 금융민주화	31
5.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33
6. 사람중심 협동경제, 사회적 경제	35
IV. 새로운 정치의 문	37
1. 기득권과 특권 내려놓기	39
2. 일하는 국회	41
3.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42
4. 부정부패 근절	44
5. 시민소통 및 참여 확대	46

목 차



V. 평화와 공존의 문	47
1. 남북경제연합	49
2. 한반도 평화구상	51
3. 균형외교와 평화선도국가	52
4.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54
5. 초당적 협력과 시민참여	56
〈참고자료〉 지역·교육·과학기술·농업·환경·주택정책	57



I . 일자리혁명의 문

“일자리는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입니다. 성장도, 복지도, 경제민주화도 모두 일자리에서 시작되고 일자리로 귀결됩니다.”

1. 사람경제 실현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람경제는 성장의 원동력을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사람경제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입니다. 정부 경제정책의 목적도 기업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됩니다. 정부가 공공일 자리를 선제적으로 늘림으로써,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동시에 내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

-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 '일자리청' 설치로 더욱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
 - 정부의 예산수립 과정에서 '일자리영향평가' 의무화
- 기업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
 -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사·정, 시민사회와 대화와 협력
 - 각종 정부 지원을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
 - 일자리 창출 성과를 기업공시 항목에 반영

②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 확대
 - OECD평균(15%)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5.7%) 비중을 절반(8%) 수준으로 확대
- 민생행정 분야
 - 민생 치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공무원 3만명, 소방공무원 3만명 확충

○ 교육분야

- OECD 수준에 준하는 학급당 학생수를 유지하기 위한 초중등 교원 확대
- 상담, 사서, 보건, 영양, 특수교사 등 특수직 교사 증원
- 15만명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 보육분야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부족한 공립유치원 교사 일자리 확충
- 18만명 민간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준 학교교사 수준으로 지위 강화
- 방과후돌봄시설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

○ 사회복지분야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2만명 확대
-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민간사회 복지부문의 처우를 공공부문 수준으로 개선

○ 보건의료 분야

-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여 환자 간병 일자리 대폭 확충
- 전 국민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인력 확충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요양 일자리 창출
- 도시보건지소 및 농어촌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

④ 중소·중견기업 강국으로 일자리 만들기

○ 일하기 좋은 중견기업 4,000개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 마케팅과 시장개척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지원 강화

- R&D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R&D개발기금'을 201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
- 국가 소유 R&D 성과를 중소기업에 무료로 이전 추진
-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역할 강화 및 중소기업전문상사의 설립 지원
- 정부조달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제고

⑤ 창조산업과 혁신벤처기업 일자리 만들기

- IT, 융합기술, 문화·예술 등 창조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 창조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문화예술SOC구축 및 활성화
- 청년 벤처 1만개 양성 및 모태펀드 2조원 조성
 -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를 위한 재도전 시스템 구축

⑥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만들기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여 일자리 50만개 창출
- 지역 밀착형 에너지산업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⑦ 지역산업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이명박정부가 자연시킨 세종시 및 혁신도시를 정상 추진하여 지역일자리 대폭 확충
 -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소, 지역대학 등 지역의 연구개발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 강화
- 지역인재 채용우대제 실시
 -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학교 졸업생 30% 채용 의무화
 - 공무원 채용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대학 추천 채용 확대
 - 지방 국공립대와 치·의대, 로스쿨의 지역출신 할당제 도입
- 모든 학교급식에 지역생산 재료 50%이상 포함하고 도농직거래 통한 친환경 지역농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
- 문화, 관광, 레저 스포츠 등 지역의 여가산업에서 20만개 일자리 창출
 - 대체휴일제 도입
 - 생태·체류형 관광 지원,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개선에 재정투입 확대

- 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예산지원 확대(4천억 규모)하고, 사회투자기금을 조성(2조원 내외)하여 대안적 경제활동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2. 세대공존과 융합을 위한 좋은 일자리 나누기

청년과 중장년, 노년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서로 나누며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아버지는 장시간노동과 밤샘노동을 하고, 아들은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편의점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극복하겠습니다. 세대간 공존과 융합을 위한 좋은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시간단축에서 시작됩니다. 기성세대의 일자리 나누기는 청년에게 '디딤돌', 여성에게 '안심', 어르신에게 '활력'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① 노동시간의 단축과 교대제 개편

- 주 52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준수
 - 연간 평균노동시간을 2011년 현재 세계 최장인 2,193시간에서 2,000시간 이하로 축소할 경우, 70만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장시간노동을 조장하는 2조 2교대제를 3조 2교대제 또는 3조 3교대제로 전환
 - 고용창출형으로 교대제를 개편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② 청년고용 촉진과 지역인재 채용 우대제 도입

-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고용분담금 도입
 - 공공기관 및 민간 300인 이상 대기업 매년 3%씩 청년(30세 미만)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고, 미준수 기업에게 분담금 부과
 - 분담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청년고용우수기업에게 고용지원금으로 지급
- 청년창업자 패자부활제도
 - 창업실패 시 불이익 조치를 최소화
 - 재기프로그램 활성화로 재도전 가능성 제고

- ‘청년취업준비금’ 지급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전제로 취업준비금 지급
 - 최저임금 50%를 최대 1년(6개월 시점 심사) 지급
-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으로 학력차별에 따른 불이익 해소

③ 중장년 퇴직자와 청년창업자간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

- 중장년의 경험과 노하우와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서로 연계시켜주는 세대간 공동창업모델 촉진 및 지원
-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문경력직 퇴직자와 창업예비자간 ‘멘토링’사업 지원

④ 세대공존을 위한 장년 및 고령자의 활력일자리 지원

- 퇴직 고령자의 전직·재취업 지원하는 실버 고용안정서비스(일자리청에 전담조직 설치)를 만들어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 유아돌보미, 아동안전보호 안내자, 문화재 발굴·관리자 같은 어르신친화형 일자리 확대
- 현행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 위주의 사회적 서비스활동으로 전환하고
 - 귀농 및 귀촌 중장년 퇴직자에 대해 보조금 및 세제혜택 부여

3.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임시, 저임금, 단기, 허드레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입니다.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차별은 모두 없애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모범적 사용자로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나쁜’ 일자리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뜻을 모으면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및 지원

-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 목표
- 임기 내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 ※ 2011년 9월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34.1만 명 중 기간제 17.9만 명, 간접고용 10만 명 등 약 28만명 대상 정규직화 추진
-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및 노사공동기금 지원

② ‘전국민 고용평등법’ 제정하여 일자리 차별철폐와 격차해소

- 성, 학력, 연령 및 고용형태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동등대우를 포괄적으로 규정
- 기업 및 사업장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적용원칙 실현
- 기업간, 직종간,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차별 축소

③ 최저임금의 현실화 등 일자리 인권보장

- ‘최저임금-사회보험 적용-근로기준법’ 등 ‘일자리 최소기준’ 준수를 위해 정부의 노동행정과 근로감독 강화

-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여, 근로시간·임금·휴가 등에 있어 모든 근로자가 최소기준의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
- 최저임금수준을 2017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
-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을 엄정하게 수행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없앰

④ 고용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 강화

- 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재발 시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 사업자의 노동자에 대한 소송남발 관행을 막고, 복직판정자가 계속 소송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법률 제정(일명 ‘최병승법’)
- 고용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고용공시제’를 도입하고, 정부조달과 공공발주사업자 선정에 고용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

⑤ 산업안전제도의 강화 및 노동건강권의 보호

- 산업재해 시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책임 강화
- 중대 산업재해 및 직업병 빈발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
-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확대 적용

⑥ 여성고용 확대 및 일과 생활의 균형

-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여성일자리 특위’를 설치, 여성의 취업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ILO 가사노동자 보호 협약’을 비준

- 여성의 경력단절 주요 요인(임신·출산 등)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성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시정조치 강화

4. 고용안정체계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지키기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난 만큼,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쉽게 정리해고할 수 없도록 그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만들겠습니다. 기업경영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해고된 분들의 재고용, 재취업과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및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지원

-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조건으로 장기실업자, 폐업 영세업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 제도 도입(월 50만원, 6개월마다 심사하여 최대 2년간 지급)
-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금의 적용대상을 확대

② 고용보험제도를 비롯한 고용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제도 운영체계에 대한 노사단체의 대등한 참여 보장
- 영세업체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 지원 확대
- 실업급여의 수혜범위 및 수준을 높여 실질적인 보장성 확보

③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비롯한 고용안정체계 구축

-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정리해고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해고요건 엄격화

- 해고회피노력(노동시간단축, 임금조정, 순환휴직 및 자산매각 등)을 충분히 선행하고 노동자대표, 혹은 노조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도록 절차 강화
- 정리해고 이후 기업경영 호전되어 신규채용시 해고자를 우선 재고용
- 기업의 정리해고 회피노력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재취업과 생계대책마련, 세제지원 등)

④ 60세 법정정년 도입 및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연장

- 2009년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60세 도입, 2013년부터 모든 공무원 정년 60세 이미 결정
- 민간부문도 2015년 ‘법정정년 60세’ 도입, 국민연금 수령연령 조정에 따라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연장 추진
- 법정정년 연장시기 이전 노사가 추가적인 정년연장을 합의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⑤ 직업훈련 및 공적 고용서비스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 공적 고용지원센터의 대폭 확충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체계화
-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 확충
- 유급학습휴가제·노사학습기금·근로복지시설을 활용한 지역과 업종별 노사공동직업훈련(직업훈련 컨소시엄)을 실시하여 노동자의 재취업, 전직 등 지원



Ⅱ. 복지국가의 문

“저 문재인에게 복지국가는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이자 미래전략입니다. 복지국가는 민주주의가 상생 발전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복지국가야말로 누구나 안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기회이자 활력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입니다. 역대 민주정부가 쌓은 복지제도의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1.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보장

국민생활을 뒷받침해줄 각종 소득지원 제도를 충실하게 만들어감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①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
-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두 배로 인상(9만원→18만원)하고, 향후 기초연금으로 전환
- 출산시 국민연금에서 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확대, 돌봄 크레딧 도입 등 여성의 수급권이 보장되는 '1인 1연금제' 기반 구축 등 연금제도 전반 개선

② 구직자 지원 제도 도입

- 청년 구직자에게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50만원)으로 6개월 후 심사하여 최대 1년간 지급
-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게 '구직촉진급여'를 매월 50만원을 매 6개월 마다 심사하여 최대 2년간 지급

③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연령별, 가구소득별로 지급을 시작하여 2017년, 12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지급

④ 장애인 소득보장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액과 맞추어 두 배로 인상(9만원→18만원)

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비수급빈곤층 축소
- 최저생계비 책정을 상대빈곤선 기준으로 전환 추진
-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급여액 확대 등 일을 통한 자립기반 확보

2. 민생지출을 줄이는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와 이를 위해 필요한 공공인프라의 강화로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돌봄, 의료, 요양, 교육, 주거 등 5대 민생지출은 중산층조차 버거운 상태입니다. 이 민생지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국민 누구나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① 의료비 절감

-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비 절감하고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
-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지원
 - 불임·난임부부의 검사 및 의료비를 전액지원
 - 고령산모의 추가적인 필수검사 전액지원
 -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출산비용 절감
-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하고,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무상제공

② 보육비 절감

-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 임기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기준 20%, 이용아동기준 40%까지 확충
 - 2020년까지 시설기준 30%, 이용아동기준 50% 확충 목표
- 필수적인 특별활동비까지 정부지원 보육비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보육료 부담이 없는 공공보육 실현
- 가정파견돌보미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 지원

③ 교육비 절감

- 방과후 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지역내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전면 확대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 실시로 공교육 토대 강화
- 지역사회내 아동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확대로 방과후 아동청소년 다양한 활동보장
- 아동청소년상담 및 전문치료를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④ 서민 주거비 절감

-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비율을 2018년까지 10%, 장기적으로 15%까지 확대
- 임대등록제를 전면 실시
-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
- 청년, 대학생 등 주거취약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텔 확대

⑤ 노인 요양 비용 절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
- 지자체별로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확충

⑥ 장애인 돌봄 비용 절감

-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욕구별, 상황별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서비스 최대 일24시간까지 확대 제공
- ‘장애인거주홈’ 지역내 전면 확대
-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용시설 확충으로 여유있고 행복한 노년생활 보장

3.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보건의료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와 보건의료인이 믿고 협력하는 의료체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생명권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①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그리고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 검사와 치료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
-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보호자없는 병원' 단계적 실현

② 의료의 계층 격차와 지역 격차 해소

-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면제·보조
- 지방 소재 대학병원 질적 수준 향상, 현대화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
- 지역응급의료체계 강화, '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실시
- 권역별 장애인 재활병원 확충,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장애인 진료 거점병원으로 지정

③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 보장

- 전 국민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도시·농촌 보건지소 확충
- 학교건강관리체계와 직장건강관리체계 강화

- 전 국민 대상 예방적 정신건강 서비스, 고위험군 집중지원 서비스 실시
-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 시행

④ 동네의원과 병원의 역할 정립

- 병상 과잉공급 해소, 의료자원의 수급관리체계 마련
- 일차의료 강화와 지역거점병원 육성

⑤ 환자 권리와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의료 실현

- ‘좋은 병의원 환자백서’ 발간, 병원 서비스 평가에 환자의 참여를 제도화
- 병원의 기준 병실 4인실로 전환
-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법’ 제정
- 암 등 중증질환 생존자 사회복귀 지원 체계 마련, 호스피스 전면 확대

⑥ 보건의료인 진료환경 개선

- 병원 인력 기준 강화를 통한 인력 확충
- 양질의 적정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정보상체계 마련
- 응급의료, 분만, 중환자실, 재활 등 필수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4.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실현

일하고 싶은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차별로부터 남녀가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하겠습니다.

① 여성의 경제력 향상

-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양성평등 고용촉진 5개년 계획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여성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
-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한시적 사업주 지원제도
-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없는 일터 및 고용상 성차별 해소

②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일·가족 생활균형

- 0세아 아버지 휴가 2주 제도화
-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
-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 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상한액 135만원 → 150만원) 및 이용대상 확대
-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마련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 가족돌봄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가족돌봄휴가제(Care Free Day) 실시
-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③ 폭력방지와 안전 및 건강 보장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등 폭력방지 3개년 국가행동계획 수립
- 성폭력 친고죄 폐지 및 가정폭력 현장의 피해자와 가해자 우선 격리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가족 지원 확대
- 아동과 여성 안심귀가 지킴이 등 밤길 두려움 없는 안전한 사회 구축
- 성범죄 방지 및 우범자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생애주기별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건강기본계획 수립

④ 정치 사회 문화적 양성평등

-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
- 공직선거법 개정 등 의사결정직에 여성의 대표성 향상
- '생활동반자보호법' 제정검토를 통한 다양한 공동체 가구의 권리보장
- 저소득 한부모 가구, 여성장애인, 여성결혼이민자, 여성1인가구, 여성농업인, 북한이탈여성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Ⅲ. 경제민주화의 문

“재벌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살려나가고 발전시키되 그러면
서도 재벌이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재
벌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 골목상권 간의 공
평하고 정의로운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게 경제민주
화입니다.”

1.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육성

제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목적은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

-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의 권익보호

②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 확대: 기존 기술탈취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
- 중소기업 협동조합에게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교섭할 권한 부여
- 납품단가 변동 등 하도급거래 주요정보의 공정위 보고 의무화

③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 조성

- 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 이익공유제 시행
-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시제도’ 시행하고 공공입찰 및 국책사업에 반영

④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정책 추진

-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추진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해 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대학 장학금 지급,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혜택 제공
- 지역단위 ‘공공기술인력지원센터’ 설립

2. 공평과 정의를 위한 재벌개혁

제가 경제민주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한마디로 '공정경제'입니다. '공정경제'는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입니다.

①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통한 경제력 집중 완화

-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분 3년 내 해소, 미이행시 해당 출자분 의결권 제한
- 공기업 제외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 하향(200% → 100%)
-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한도 4%로 축소,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 금지

②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규제

-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
- 회사·소수주주의 피해 없도록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③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3배 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의 대상 확대 및 요건완화
-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및 처벌강화, 이사 자격요건 강화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3.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가계부채 대책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채무자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채무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펴야 합니다.

①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에타 3법' 도입

- 이자율의 상한을 25%로 인하, 위반시 당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 서민금융 위축 방지 위한 10%대 대출시장 육성
- 대리인 지정 통해 원활한 채무조정 기회 부여 및 인권침해 방지

②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 지원

- 1인 1계좌의 “힐링 통장” 허용, 지자체별 ‘채무힐링센터’ 설립 지원
-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일정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금지
- 변제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은 통합도산법상 개인파산 절차 조기 활용

③ 주택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대출 중심으로 재편성

- 변동금리, 단기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박에 대비해 주택금융공사 재원 확충하여 지원
-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연금’ 활성화

4. 금융소비자의 권리찾기, 금융민주화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마다 부담은 국민이 지고, 이익은 금융회사와 대기업에게만 돌아갔습니다. 한마디로 부담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거시 건전성 감독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중심으로 사고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이해는 무시되었습니다.

① 금융감독체계 혁신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독립기구 설립
 -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의 통합
 - 정부조직개편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 적용
 - 금융감독기구의 관료적 독점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혁신 및 자율성 보장
-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에타3법’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신용기회 차별금지”를 법제화
- 가산금리, 수수료,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규제강화

② 정책금융과 서민금융 강화

- 중소기업 자금경색 등 금융애로 해결할 ‘신용중재센터(Credit Mediation Center)’ 설립
- 한국판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제정
- 우리금융 민영화 시 지방은행 분리매각 추진, 지방은행 없는 지역의 지방은행 설립 지원
-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조정

- 고용창출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산업, 정규직 고용 확대기업 등 금융지원 강화
-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등 조합형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③ 독과점 폐해 방지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

- ‘금산분리’ 원칙 강화를 위해 산업과 금융이 융합되어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실시
- 계열회사 일감몰아주기와 금융회사 간 담합 엄격 규제
- 모든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5.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과 분배의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사회가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기 위해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의 민주화'를 위해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대등한 노사관계를 보장하겠습니다.

① 비정규직 규모 감축과 차별 해소

- 기간제법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를 규정하여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 억제
-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직접고용 원칙 확립
- 불법파업 판정시 사용사업주를 근로자로 간주(고용의제)
-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시 정부지원 강화
-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최저임금의 현실화

②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초기업 단체교섭 강화

-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및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의 교섭에 있어 노사합의를 우선토록 함
- 공무원 및 교원의 단체교섭 정상화, 초기업별 교섭에 대한 법제도 정비
-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구성 허용
- 노동자 단체행동권 보장 및 직장폐쇄 남용 방지,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③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

- 노동자의 경영참여 촉진을 위해 우리사주제도 개선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개정을 통해 노사협의회와 노동자의 경영참여 촉진
- 공공기관의 운영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및 공익적 가치에 위배되는 민영화 재검토

④ 사회적 대화 활성화

-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개칭하고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로 개편해 위상 강화
- 산업별,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 활성화

6. 사람중심 협동경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를 통해 지역중심 순환경제가 활성화되고 품위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가의 대열에 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① 사회적 금융 조성

- 시중은행 및 신용보증기관 등 기존 금융조직 활용하여, 미소금융, 공공자금 금융 제공
- 신용협동조합, 공제조합 등 서민자조금융 활성화
- 사회 투자기금 2조원 조성

②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감대 강화

- 참여 확대 위한 홍보매체 개발·보급, 정보플랫폼을 만들어 접근성 제고
- 청년층 ‘창조적 역군’ 10만명 발굴·양성,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 공공구매 활성화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 지원 유도

③ 공공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모델을 통해 확대

- 사회적 경제 통한 돌봄서비스나 보육 등 공공서비스 공급을 30%까지 확대

④ 사회적 경제 모델 적극 활용하는 기초자치단체 집중 지원

-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원스톱서비스 지원

- 지역의 기업, 대학, 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
-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사회적 경제 협력네트워크 지원
-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등과 협력하여 제품 수출 지원

⑤ 베이비부머세대, 경력단절여성, 귀촌희망자의 제2의 인생 설계 지원

-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연수프로그램, 사업체와 연계한 인턴십 지원
-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창업보육 기능 강화
- 빈집이나 사용하지 않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⑥ 사회적 경제 정책지원

- 대통령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기법 체계화



Ⅳ. 새로운 정치의 문

“새로운 정치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이 권한 밖의 특권을 갖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만을 행사할 것입니다.”

1. 기득권과 특권 내려놓기

‘비우고 버리고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정치를 불신한다고 정치 자체를 위축시켜선 안 됩니다. 바르게 작동하도록 고치는 게 정답입니다. 정당을 혁신하고, 제도를 개혁해서 정치와 정당의 역할을 오히려 강화해야 합니다. 제 기능 못했다고 정당과 정치를 축소시키는 것은 결코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① 제왕적 대통령의 특권 내려놓기 : 책임총리제 / 정당책임정치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이외의 권한은 갖지도, 행사하지도 않을 것
-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준수 등 총리의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 실시
- 대통령은 당의 공천, 인사, 재정 등에 개입하지 않음
- 국정운영 과정에서 여당의 정책수립 기능을 존중하는 정당책임정치 실현

② 지역주의 기득권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지역구 의석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 조정
-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하여 지역주의 기득권을 타파
- 선거구획정 기능을 독립기구에 일임

③ 국회의원 특권 포기

-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민간위원을 절반이상 임명하고, 윤리위의 국회의

원 징계안은 일정 시한 내 본회의 상정 의무화

- 헌정회 연금 폐지
-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 독립적인 국회의원 세비심의위원회 설치

④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

-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단, 기초의회 전체 정원의 20% 정도는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몫으로 여성에게 할당)
- 중앙당에 집중된 정치적 권한을 각 시·도당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이양하여 분권화된 정당, 민주화된 정당 만들기
- 사실상 중앙당 지배하에 있는 정책연구원을 실질적으로 독립기구화하는 등 중앙당의 정책기능 강화
- 기존 오프라인 정당에 SNS와 인터넷을 탑재한 온오프결합 네트워크정당 만들기
- 기존의 지역위원회에 더해 SNS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직장위원회’ 및 ‘대학위원회’를 둬으로써 당원구조를 3원구조로 개편
- 정책당원제 도입과 당원협의회 개혁

2. 일하는 국회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 남용,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이런 것을 근본 문제로 보면 그에 대한 국회의 비판, 견제, 통제 방안들이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국회야말로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민의의 대표 기구이지 않습니까?

① 국정감사 상시화

- 정기 국회에 한정된 국정감사를 임시회마다 실시함으로써 국정감사를 상시화

②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활성화

- 부처별, 사안별 소위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③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강화

- 전문성 및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

④ 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 요건 완화

- 상임위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함

⑤ 국회 예산·결산 심의 기능 강화

- 결산 심사를 정부 결산 직후 실시(6월 국회)
- 예산 심사를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확정단계부터 시작
- 예결특위 상설화 검토

⑥ 개헌 시,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 국회 이관 검토

3.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이 정부에서 정치검찰의 행태가 극심해졌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많아지면서 응당 해야 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검찰 수뇌부가 정권에 영합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건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문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1) 검찰개혁

① 정치검찰 청산

○ 제도개혁

-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권한 대폭 확대

○ 인적쇄신

-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수사나 기소, 봐주기식 수사에 대해 진실과 원인 규명 및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 검사가 자신의 수사와 기소에 책임지는 인사시스템 구축

②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
- 검사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

③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경찰에게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 부여
- 중장기적으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대

④ 법무부의 탈 검찰화

- 법무부 국장급 이상 간부직에 대한 검사 순환보직 금지
- 행정부에 대한 검사파견제도 전면 재검토

2) 경찰개혁

①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 일제시대와 유신시대의 잔재인 경찰의 불법적 민간사찰 금지
- 민생치안분야 및 범죄정보 수집기능 강화

② 치안 양극화 해소 및 민생치안 확보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치안 강화
- 민생치안 경찰, 생활안전 경찰로 전환

4. 부정부패 근절

특권과 반칙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권층이나 힘 있는 사람들의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엄단하겠습니다. 재벌이 돈으로 정치와 행정을 매수하여 특권을 키우지 못하도록 특별히 경계하겠습니다.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람이 고위공직에 오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간 분야도 반부패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맑고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① 국가청렴위원회 부활(반부패 종합대책기구)

② 대통령과 대통령후보자의 형제·자매까지 재산 공개

③ ‘5대 중대부패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혁

-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고위공직자와 사회적 책임이 큰 재벌을 불기소할 때는 ‘검찰시민위원회’ 회부를 의무화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제도화
-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함
- 대통령 사면권 제한

④ 5대 중대 부패 범죄자 및 비리 행위자 공직임용 금지

- ‘5대 중대부패 범죄자’ 및 ‘5대 중대비리 행위자’는 공직임용 금지
- 공직자 인사검증 매뉴얼 법제화

- '5대 중대부패 범죄':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 '5대 중대비리 행위':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비리

⑤ 공직사회와 재계의 검은 유착 차단

- 공직자 퇴직 후, 범무법인 포함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 강화
-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 시,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보고 의무화

⑥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 공공영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회복 뿐만 아니라 사전보호조치 강화
- 민간영역에 있어서도 공익신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보호조치 및 구제조치의 실효성 강화

5. 시민소통 및 참여 확대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이 늘 함께 참여하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들과의 소통도 국민들의 참여도 부족했습니다. 마치 정치인들끼리의 정치, 국민들하고 동떨어진 정치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국민들하고 훨씬 더 소통하고 국민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민들과 동행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 ① 국민에게 공천권 돌려줌으로써 공직 후보자 선출에 국민참여 확대
- ② 국민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SNS와 인터넷을 탑재한 온오프네트워크 정당화
- ③ 공공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명령1호'와 같은 국민정책제안시스템을 확충하여 소통하는 정부를 구축
- ④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여 국민의 참정권 확대



V. 평화와 공존의 문

“한반도, 다시 평화와 공존의 시대”

“한반도 경제 시대의 개막을 통해 한국 경제의 제2의 도약을 실현하고, 그것을 토대로 평화-경제-안보가 선순환하는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저의 꿈은 남북이 함께 잘 살고 자유로이 왕래하는 풍요로운 한반도를 보는 것입니다. 분단의 대물림을 끊고 다음 세대에게 통일된 한반도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1. 남북경제연합

우리와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에 투자하여 북한 경제와 연계가 깊어지면 남, 북, 국제사회가 경제적으로 서로 얽히는 복합적인 경제그물망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에 경제성장은 물론 평화의 여건까지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① 남북경제연합은 경제분야에서 먼저 통합을 이루어서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

- 북한을 거쳐 북방대륙으로 진출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남북이 함께 잘사는 협력성장의 시대 개막
- 남북경제연합은 6.15 선언에 합의한 남북공통의 통일방안에 따라 남북연합과 통일의 길로 나가는 경제적 초석
- 남한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북한경제의 발전이 동반 실현되어서 남북 간 상호이익(win-win)이 되는 경제협력 추구
- ‘남북 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0.4 선언의 48개 합의사항을 비롯하여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선언에서 합의한 경제 분야 관련 사항 실천

②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포항·삼척·동해와 나진선봉 등 북한의 동해안을 거쳐 중국·러시아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해운·철도·물류·에너지 경제권인 환동해경제권 구축

- 설악산·평창·비무장지대(DMZ)·금강산을 연결하는 친환경 국제관광지대를 만들고, 블라디보스톡에서 금강산·동해·부산·후쿠오카를 연결하는 크루즈 관광 시작

- ③ 제주에서 전라, 충청, 인천, 경기와 북한 해주, 남포, 황금평, 신의주 등 한반도 서부지역과 발해만 경제권을 포함한 중국 동부지역을 하나로 묶는 황해경제권 구축
 - 그 중심에 있는 인천·개성공단·해주 삼각지대를 남북공동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

- ④ 한반도의 동해와 서해,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에 인구 6억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촉진
 -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동북아 전력망으로 연결하는 ‘아시아 슈퍼그리드 사업’ 실현

- ⑤ 남북경제연합을 통해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과 인구 8천만의 한반도 공동시장 탄생
 - 세계에서 미국, 독일, 일본 3개국만이 도달한 ‘30~80시대’ 진입

- ⑥ 남북 협력성장을 위해 북한의 취약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 및 ‘북한개발투자공사’ 설립

- ⑦ 인수위에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취임 후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남북 경제연합을 위한 경제협력 시작

- ⑧ 환경, 생태, 문화를 고려한 ‘지속발전이 가능한 한반도’를 목표로 한 남북관계 추구

2. 한반도 평화구상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대결구도를 해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포괄적인 접근만이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게 해 줍니다.

- ① ‘북핵-남북관계·평화체제·북미대화’의 동시병행 발전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
- ②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
 -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근본적 해결’
- ③ 한반도평화 구상 실천 계획(로드맵)
 -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초안 확정(인수위) →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조율(2013년 상반기) → 남북정상회담에서 협의(2013년 하반기) → 각국과 최종 조율(2013년 하반기~2014년 상반기) → 6개국 정상 선언 도출(2014년 상반기) → 정상선언 이행 위한 기구설치 가동(2014년 하반기)
 - 임기중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실천하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완료 이후 6자회담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적 전환하고, 비무장지대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본부 유치
- ④ 북핵 해결 및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의 결성으로 이어지는 미래 비전 담지

3. 균형외교와 평화선도국가

한반도가 남북한과 미-북, 미-중의 갈등의 장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장이 되도록 우리는 적극적인 '평화 촉진자'의 역할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① 공고한 한미 동맹과 한중 경제관계의 비약적인 증대 등으로 인해 균형외교 필요

- 러시아, 일본 등 각국과 다자협력을 추구하여 평화공영의 동북아 실현 적극 추구
- '가치와 국익', '동맹과 다자협력', '국가와 국가', '세계화와 국가정체성'간의 관계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균형외교 추구

② 남북화해를 실현하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

-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에서 평화협력의 촉진자 역할
- 국제사회의 평화 이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인류평화에 앞장서 기여하는 평화 선도국가 지향

③ 국민다수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간에는 호혜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민중시 통상외교 추구

- 식량, 에너지, 자원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양자, 다자적 외교 노력 전개

④ 국제적인 보편규범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구하는 글로벌 외교 강화

-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세계 시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가정책을 홍보하는 공공외교 강화

- 해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모국 발전과 연결
 - 우리의 개발 경험과 지식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동시에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개발원조(ODA)의 확충하고 새롭고 참신한 참여 개발형 외교(participatory development diplomacy) 추진
- ⑤ 국제사회 진출을 꿈꾸는 젊은 인재들을 위해 글로벌 프론티어(global frontier corp) 제도 도입
- 재임 5년 기간 중 최소 2만여명의 젊은 인재들을 국제기구, 국제 NGOs, 다국적 기업, KOICA 프로그램, 국제교류재단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외에서의 연수, 인턴, 펠로우 기회 마련
- ⑥ 기후변화, 인간안보, 자연재해 등 비전통적 안보 사안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4.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저는 대통령이 되면,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국방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남북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북한과 군사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① 자식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는 평화로운 안보환경 구축

- 확고한 국방태세를 갖추고 남북 사이에 긴장완화와 군비통제를 위한 대화를 추구하여 한반도 평화증진
- 남북국방장관회담 정례화 및 기합의 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군사당국자간 핫라인 우선 개설

② ‘군사력 정예화를 통한 선진강군 건설’이라는 국방 목표에 따라 문민통제와 합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예강군으로 국군을 육성하고 3군 균형발전 추진

③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확실히 수호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여 NLL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황해경제권의 비전 실현

④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국방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화와 성숙한 발전 추구

- 주변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관계도 균형 있는 발전 추구

⑤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군인복지 향상

- 군 복무기간을 ‘국방개혁 2020’의 계획대로 18개월로 단축하고, 군을 정예화 하며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으로 축소
- 군대 내에 군의 전문성 향상하고, 전역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관리공단’ 설립해 전역 후 일자리 문제 해결

⑥ 대통령이 책임지는 확고한 국가위기관리 기능 복구

- 통일외교안보 정책 통합조정 시스템 부활
- 국민과 소통하는 안보정책 결정 체계 구축
- 시민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범정부 협력네트워크 구축

5. 초당적 협력과 시민참여

한반도 평화구상과 남북경제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습니다. 야당과 정책의 기초와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외교안보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구상과 남북경제연합 추진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분단체제 극복의 길을 걸겠습니다.

① 야당과 정책 기초와 방향을 협의하고 외교·안보 정보를 공유

②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 정책 수립 단계에 국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통일외교국방정책의 사회적 공감대 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동반형’ 교류협력 모델 구축
- 민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보수와 진보의 남남대화 적극 지원
- ‘여성 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2000년 채택)에 따라 여성의 적극 참여와 역할 제고

〈참고자료〉 지역·교육·과학기술·농업·환경·주택정책

‘문재인의 5대문’ 이외의 기 발표된 분야별 정책 요약임. 나머지 분야 정책도 추후 종합 정책공약집을 통해 정리 및 발표 예정

□ 지역정책

지역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안심하며 생활하는 ‘지역 복지-교육-일자리-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의 기회와 공평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행복 균형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1. 명실상부한 분권국가 건설

-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한 4대 특별전략’ 제안
- 지방사무와 지방세 비중 40% 이상 상향
- 지방분권과 자치입법 기반 구축

2. 지역경제권별 교육-연구-생산-일자리 결합된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 지역별로 기업, 정부출연연구소, 기술지원기관, 거점대학 연계
- 지역공공기관 지역학교 졸업생 30% 이상 채용 의무화
- 공무원 채용 지역우선 채용, 대학추천 채용 확대
- 지방 국공립대, 차·의대, 로스쿨 지역출신 할당제 도입

- 모든 학교급식에 지역생산 재료 50% 이상 포함
-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촉진, 법인세 차등화 등 인센티브 도입

3. 네트워크형 국토 연결망 완성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 경제권역별 완결성 강화 중심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 주민 생활편의 제고, 소외계층 서비스 제공 최우선

4. 전국 '행복지역 공동체' 구축

- '국가 최소 기준(national minimum)' 보장, '민생지출 국가책임제' 실시
- 총리실 산하 지역재생본부 설치 및 재정투자 확대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 교육 정책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국민과 정부의 역량을 모두 발휘해서 공정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교육이 다시 우리 사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고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 교육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기

- 취학연령 단축, 유치원 1년 의무교육, 초등학교 5년 단축 등 학제 개편 검토
- 초등학교 교육을 혁신학교 방식으로 전면 개편
-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연령별 학습시간 기준과 적절한 휴식,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기준이 포함 되는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

- ‘작은 도서관 4000개 만들기’ 정책 등 ‘교육과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에듀케어 시스템’ 구축

2. 공교육의 정상화

-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선택이 있는 교육-행복한 중2 프로젝트’ 실시
-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 국제학교와 외국인 학교 관리 강화
- 고교등급제 불허 및 고교학점제 정착

3. 대학입시 개선을 통한 교육불평등 극복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내신중심 선발을 기조로 대입제도개선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대학입시전형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 입학사정관제 질 관리 시스템 도입, 대학입학지원처(가칭) 상설기구화

□ 과학기술 정책

1. 국가과학기술정책 전담 ‘과학기술부’ 부활

- 국가의 장기적 과학기술 발전 정책 수립과 인력양성 추진, 기초연구 등 주관
- 정부 각 부처의 연구개발(R&D)기능에 대한 총괄적 관리권한 및
- 관련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 편성권한 부여

2. 2017년까지 정규직 연구원 비율 90% 달성

- 공공부문의 상시직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
- ‘공공부문 연구인력 정규직 채용목표제’ 추진,
- 2017년까지 10,000명의 정규직 신규 채용 추진

3. 연구원 정년 65세로 환원

- 이공계 기피현상 완화, 과학기술인의 연구의욕 고취
- 초고령화 사회에서 경륜 있는 연구원의 활용을 위해

□ 농업 정책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1항은 농업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문제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 ‘식량주권’ 확립위한 식량자급율 목표제 도입

- 식량자급율 2030년까지 50% 달성
- 국가식품계획 수립, 농지총량관리제도 도입

2. ‘안전한 먹거리’ 확보

- 친환경농업 육성, 먹거리 복지, 공공급식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
- 친환경농업을 2020년까지 30% 수준까지 향상

3. 고령농, 영세농 등 농어민 ‘사회안전망’ 확충

- 농어민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농어촌주민 차별 철폐

4.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생산기반 재정비

- 에너지 절약형 농업경영체 육성
- 농촌생활용 에너지수용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5. 농업인 유통기능 강화를 통한 가격결정권 주도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자조금제도 강화
- 생협 등 직거래 유통 확대

□ 환경 정책

1.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국토의 회복

4대강 사업은 환경재앙, 혈세낭비, 부실 토목공사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위한 ‘국민 참여 검증단’을 구성하고 ‘4대강 복원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2. 에너지 정책 전환·탈원전 생태에너지 구상

더 이상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원전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로 에너지 독립을 구상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와 삶의 양식까지 바꾸는 가치 ‘제3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정책 기조 전환
- 단계적으로 탈 원전으로 전환
 - ※ 신규원전 건설 금지, 설계수명 종료한 노후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원전 조기 폐로 검토
-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도 제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달성, 200조 투자)
-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의 통합과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 시행

□ 주택정책

1. 자가주택-공공임대-민간임대의 균형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저출산·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 집값 하향 안정 시대, 주거양극화 시대에 걸맞는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 임대주택 등록제 전면 시행
- 1회 임대차계약갱신 청구제도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 도입
- 공공임대주택 확충(연간 12만호, 2018년까지 10% 확충)
- 계약임대주택 제도 도입과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텔 등 확대
-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국민주택규모 이하, 6억 미만의 주택)

2. 사회경제 재생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저 문재인은 도시재생 사업을 국책사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비사업 예산을 2조 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리고, 총리실 산하에 도시재생 총괄조직을 두어 관리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기본법 제정
- 지방도시의 재생과 주거환경개선에 집중 투자
- 기존 뉴타운 출구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도입
-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제도 개선(세대분리형 아파트와 임대형 리모델링 지원)

3. 주거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주택의 제공

청년주거·실버주거·여성주거·응급주거 등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수요를 제도권에서 본격적으로 지원하여 다양한 주거복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용도 전면 개편(주택개량사업 등 지원)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집수리 서비스 지원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주택관리협동조합 활성화 지원